

**전문가 간담회
자료**

본 자료는 2008. 6. 24(화) 夕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

2008. 6. 24(화) 10:00 ~ 12:00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작업반

동 자료는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 로 그 램

09:30 ~ 10:00

등록 및 네트워킹

10:15 ~ 12:15

**농림수산물분야 -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사 회 : 이동필 (KREI 선임연구위원)

발 표 : 최지현 (KREI 선임연구위원)

토 론 : 이정희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김동환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교수)

우범기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장)

이상만 (농림수산물식품부 식품산업팀장)

조웅제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전혜경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목 차

토론주제 :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1. 우리 농정의 흐름과 식품산업 육성의 필요성	1
가. 농정의 전개과정	1
나. 우리농정과 식품산업의 관계	3
다. 외국의 식품산업정책 개념과 시각	6
2. 식품산업정책의 효율적 재정지원 방향	8
가. 정책 추진방향과 정부 역할	8
나. 식품산업의 효율적 재정지원방향	11
다. 일본의 식품산업정책	17
3.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강화 방안	19
가. 연계의 필요성	19
나. 연계가능성 검토	20
다. 연계 지원방안	23
4. 요약 및 결론	27
<참고자료> 일본의 식품산업진흥과 농업과의 연계강화	30

토론주제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어업의
교부가가치화 방안**

1. 우리 농정의 흐름과 식품산업 육성의 필요성

가. 농정의 전개과정

1) UR 이전의 농정

☐ 제도정비기(1960~1967)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맞추어 농업증산계획을 수립하고 농지 확장과 생산력 제고에 주력하였으며, 지력증진법, 가격안정기금법, 농업재해대책법, 경지조성법, 풍수해대책법 등 식량증산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시기

☐ 증산농정기(1968~1977)

-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1971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하여 1977년에는 주곡의 자급을 실현
 - 1970년부터 추진된 새마을운동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시도

☐ 농정갈등기(1978~1985)

- 이중곡가제로 누적된 양특적자가 통화증발을 유도해 물가상승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양정전환론이 제기

☐ 농정전환기(1986~1993)

- 농어촌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라 긴급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였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의 제정으로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정기조를 전환

- 제도적 기반을 근간으로 하여 1992년 본격적인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신농정5개년계획」으로 조정

2) UR 이후의 농정

□ 개혁농정기(1994~1997)

-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확충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 농정의 기본 틀을 자율농정 체제로 전환하고, 농지·유통·협동조합·양정 등의 제도개혁을 본격화

□ 구조조정 농정기(1998~2003)

- 구조조정 농정이 시장 개방과 세계화 대응전략으로 추진됨.
 - 제1단계 구조개선사업(1992~1998), 제2단계 구조개선사업(1999~2004년)기간에 45조원 투입계획 수립
- 논농업직불제(2001), 농작물재해보험(2001), 농가부채경감대책(1998~2001) 등 농가경제안정화를 위한 시책들이 추진됨.

□ 농정패러다임 전환기(2004~)

- 개방 확대에 적응할 수 있는 중장기 농정방향으로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2013)과 국고 119조원 투융자계획이 수립되었음.
 - 농업정책은 시장지향적 구조개편, 친환경 고품질 농업, 신성장동력 확충을 중점분야로 추진
 - 소득정책은 직불제 확충, 농외소득 증대, 경영안정 강화에 주력
 - 농촌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인프라 확충, 농촌지역개발을 중점으로 추진

- 농정의 중심축이었던 쌀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쌀산업의 시장기능 강화 도모
-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시장지향적 구조로 전환
 - 정책의 중점이 농업에서 농업·농촌·식품으로 전환, 농식품 안전성 관리제도 강화,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강화가 화두로 대두
 -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에 대비,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
 -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 균형발전 도모

나. 우리 농정과 식품산업과의 관계

1) 농정패러다임의 변화: 식품산업 육성이 왜 화두가 되고 있는가?

□ 食 = 農 에서 食 = 農 + 食品産業으로 개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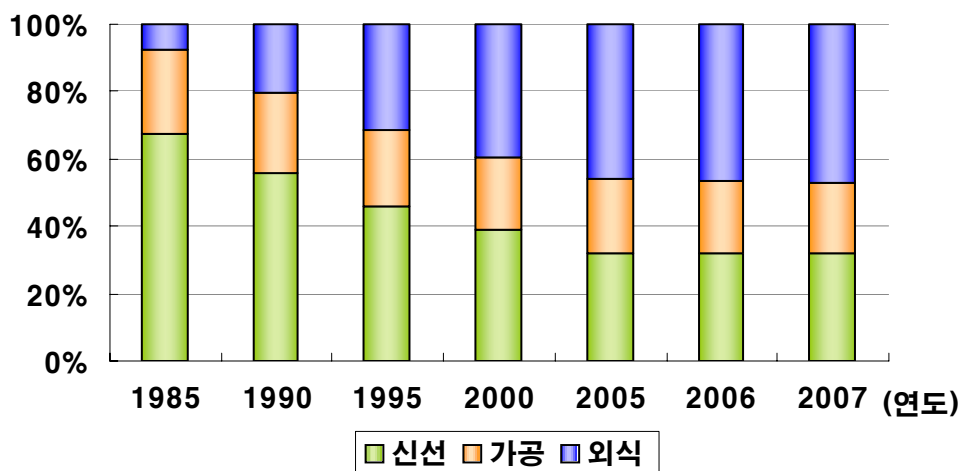
- 소득증대에 따라 식품소비패턴이 고급화 및 다양화되고,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외식소비가 급격히 증가함.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 등 식품산업이 크게 성장함.
 - 외식소비 비중은 1985년 8%에서 2007년 47%로 급증
 - 식품산업의 연평균성장률(95~2005년)은 9.3%로 농림수산업의 3.3%를 크게 초과

□ 푸드시스템(food system) 개념의 정착

- 식품산업의 급성장으로 농업의 문제는 더 이상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생산)-식품제조(가공)업-식품유통업-외식산업-식품소비의 푸드체인(food chain)의 문제로 인식되어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이 요구됨.

- “食”의 외부화가 급진전되면서 식품안전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식품안전관리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함.
- 농업문제는 먹거리 문제로 재인식

[그림 1] 도시가구의 식품비 지출 비중 변화



<표 1> 식품산업의 GDP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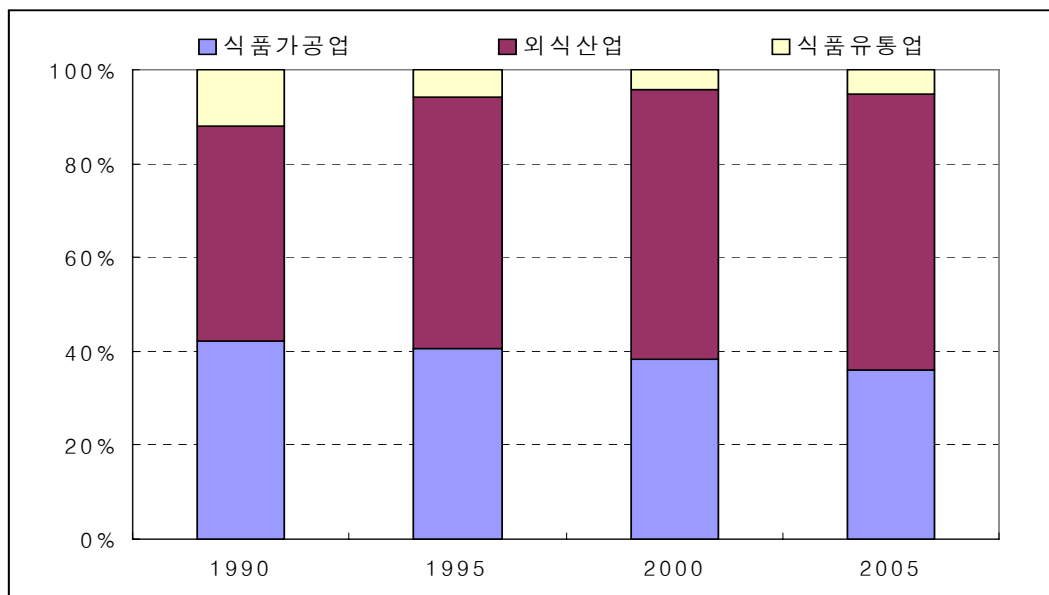
단위: 10억 원,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성장률 (’90/’0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업	14,797	8.8	22,541	6.3	24,601	4.8	23,969	3.3	3.3
식품가공업	3,109	1.9	6,226	1.7	8,646	1.7	10,093	1.4	8.2
외식산업	3,390	2.0	8,236	2.3	12,901	2.5	16,448	2.3	11.1
식품유통업	884	0.5	904	0.3	959	0.2	1,456	0.2	3.4
식품산업	7,383	4.4	15,366	4.3	22,507	4.4	27,997	3.9	9.3
전산업합계 (GDP)	167,713	100.0	359,582	100.0	514,054	100.0	721,474	100.0	10.2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식품산업의 산출액이 증가했으나 전산업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식품산업 산출액은 농림수산업 산출액을 1990년부터 계속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크기도 확대되었음.

[그림 2] 식품산업 내 각 부문 GDP 비중



<표 2> 식품산업의 산출액 및 비중

단위: 10억 원,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성장률 (’90/’0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업	22,108	5.5	33,148	4.0	38,115	3.0	41,511	2.2	4.3
식품가공업	22,258	5.5	33,846	4.1	47,036	3.7	54,915	3.0	6.2
외식산업	12,291	3.0	25,684	3.1	33,361	2.6	44,936	2.4	9.0
식품유통업	1,409	0.3	1,639	0.2	1,790	0.1	2,755	0.1	4.6
식품산업	35,95	8.9	61,170	7.3	82,188	6.5	102,607	5.5	7.2
전산업합계	403,230	100.0	834,246	100.0	1,269,952	100.00	1,861,199	100.0	10.7

□ 식품의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

- 과거 食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으나 현대사회에서 食은 건강을 위한 선택의 문제가 되었으며, 食의 세계화로 문화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고, 식문화가 국가 이미지와 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일본의 기꼬만 간장, 스시, 한국의 김치와 비빔밥 등

□ MB 정부의 농업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조직 개편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식품산업과 농업을 아우르는 정책을 표방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농림부를 “ 농림수산식품부” 로 개편함. 농정에서 농업과 식품, 소비자를 함께 다루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 독일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캐나다 농업식품부, 스웨덴 농업 식품소비자부,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다. 외국의 식품산업정책 개념과 시각

□ 식품정책은 소비자 관점의 농업정책

- 미국, 유럽 등 서구국가의 식품정책(food policy)은 전통적으로 식품가격, 유통, 수급 및 산업 등 농정 전반과 식품안전, 영양 등 소비자 관련정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의 농정으로 해석되고 있음.
- 최근 세계적으로 농업구조, 경영, 소득 등 전통적인 농업문제보다는 시장 및 소비자와 연관성이 많은 식품문제가 주요농정이슈로 부상하여 식품정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농정대상으로 자리 매김함.

□ 식품산업은 푸드체인상의 농산물 품목별 산업

- 서구국가에서 식품산업(food industry)의 개념은 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푸드체인(food chain) 상에서의 농산물 품목별 산업으로 해석됨.
 - 쇠고기산업(beef industry), 돈육산업(pork industry), 쌀산업(rice industry), 토마토산업(tomato industry)
 - 가공산업(food processing industry)과 외식산업(food service)은 농산물의 품목별 기능으로 존재
- 대부분의 선진국은 식량자급률이 높아 자국산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비율이 높고, 품목별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잘 이루어져 있어 식품산업 개념이 농업과 별개로 인식되지 않는 특징이 있음. 이들 국가는 농업정책 개념 속에 식품산업 정책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농정구조임.
-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낮아 국내 농산물 이용비율이 낮고, 품목별 계열화 정도가 낮아 식품산업은 농업과 별개의 산업으로 인식하여 식품산업정책에 대한 개념정립과 정책대상을 올바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산업정책의 효율적 재정지원 방향

- 식품산업은 일반적으로 식품가공(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업을 포함한 산업으로 정의됨. 식품안전정책은 식품산업과 중요한 연계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본 논의에서 제외함.

가. 정책 추진방향과 정부 역할

1) 추진방향

□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

-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생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농식품과 농산업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 산지 규모화, 계열화, 산지의 전문 마케팅 능력 강화 등
- 푸드체인 전반을 모니터링하려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포함한 농축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각종 인증제의 효과적 정비 및 홍보, 유기식품인증제 도입 등
- 소비자가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식생활 개선, 식생활지침 마련 등

□ 우리 식문화의 유지 발전과 연계한 정책 추진

- 우리 식문화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전통식품과 전통 음식을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향토음식의 보전과 발굴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고, 지역식품산업을 지역 식문화와 연계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해 궁극적으로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지역의 관광사업과 연계한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 영국 로컬푸드(local food)운동, 이태리 슬로푸드(slow food)운동
일본 지산지소운동 등

□ 우리 농식품의 공세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식품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중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가 필요함.
-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함으로써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2) 정부역할

□ 공공성 있는 사업 수행

- 식품산업정책 수행은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공감대 형성이 가능함.

- 공공성을 띤 식품산업정책은 농업과의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 확보 및 계승, 식문화의 국제교류 등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인프라 구축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단, 식품기업 활동이 공공성을 가지는 경우 지원 검토 가능

- 육가공회사의 양돈계열화사업, 국산원료 사용한 식품업체의 한식 해외프랜차이즈사업 등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높여 주는 조성기능은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예로 산지와 연계(가공 또는 외식업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네트워킹사업, 식품산업 관련 통계의 생성과 보급, 식품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핵심 R&D등을 들 수 있음.

□ 식문화발전과 대외위상제고

- 한국형 식생활의 개발 및 보급은 우리나라의 식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농식품 소비확대를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생활지침의 개발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주요 정책임.
- 초·중·고의 경우 90% 이상이 학교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령별 기호에 맞고 대량조리에 적합한 한식 식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전통식품의 육성은 국내 식문화 계승발전에 도움이 되며, 국내 농식품 소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한식의 세계화는 식문화교류를 통한 국가 위상제고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나. 식품산업의 효율적 재정지원방향

1) 식품산업정책

- 일반적으로 식품산업정책은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전통식품산업, 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 식품관련 R&D 등 기능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고, 품목별로도 축산업정책, 쌀산업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목관련정책부서에서 각각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예: LPC나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담당부서, RPC 등 쌀가공산업은 식량정책담당부서, APC 등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은 유통정책담당부서에서 수행

〈표 3〉 품목별 · 기능별 식품산업정책 분류(예시)

구분		주요정책(사업)
품목	축산	• 축산물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운영, 계열화사업 등
	청과물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운영 등
	쌀	• RPC 운영 등
기능		• 식품R&D, 식품외식정보분석, 전통식품산업육성사업 외식전처리산업육성 등

2) 지원원칙과 고려사항

□ 지원원칙

- 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식품산업정책 관련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성이 높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
 - 통계정보 D/B 구축, 인증지원, 중장기 R&D 투자 등
 - 농업과 연계효과가 큰 사업 위주의 지원
 - 산지 유통 및 가공시설, 원료수매자금 지원 등

□ 고려사항

- 식품산업정책은 푸드체인 전체를 고려한 산업정책적 시각에서의 지원이 요구됨.
 - 영세한 식품산업의 규모화 등을 위해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면 시장 왜곡과 모럴헤저드 초래
-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농수산물의 가격과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함.
 - 가격과 품질의 업그레이드 없이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식품산업을 무리하게 연계하는 시책은 지양

3) 식품산업정책의 지원방향

□ 정책 분류에 따른 지원방향 모색

-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식품산업정책은 사업성격에 따라 “공공성 유지분야”, “전략적 육성분야”, “선택적 조성분야”로 구분함.
- 공공성 유지분야는 통계정보 제공, 인증체계 구축 등 인프라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공공성이 강하며,
- 전략적 육성분야는 전통식품의 발전과 계승, 식문화교류 및 전파 등의 분야로 정부개입이 필요
- 선택적 조성분야는 성격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 육성 분야가 이에 해당함. 사업의 성과가 기업의 경영개선,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능력제고 등에 달려 있다면 정부개입의 축소가 바람직함.

□ 식품 R&D

- R&D 투자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신성장 R&D 분야와 유통기술 등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에서 분산 수행하는 식품 R&D는 일원화해야하며,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표 4〉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유형분류와 추진과제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공공성 유지 분야	통계·정보 제공	식품산업 정보·통계 선진화	- 현황 및 시장동향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산지와 식품제조·외식업체 간 정보교류 확대
	식품인증	식품인증 제도의 확충·정비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시행 - 농수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표준규격을 “농수산물식품 통합규격제도”로 통합 - 지리적 표시제의 손해배상청구권,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등 권리보호 강화
	식생활·식문화 교육	국산 농식품의 소비기반확대 및 합리적인 식품소비 유도	- 맞춤형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식문화 지침 보급 및 교육활동 전개
	R&D	식품 R&D 투자액의 확대	- “식품”분야 R&D 독립, 투자 확대 - 신성장 수요분야 집중
전략적 육성 분야	전통식품	전통식품의 세계 명품화	- 전통식품의 현대화·과학화 및 글로벌화 - 전통식품 생산업체의 산업화 지원 - 전통식품 품질인증·명인제도의 활성화
	한식세계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진입	- 한식 표준화 등 세계화의 토대 마련 - 한식 홍보 및 마케팅 - 한식당 고급화 및 고품격 문화상품화 - 해외진출 외식업체 재정·외교행정적 지원 확대
선택적 육성 분야	식품제조업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식품기업에 최적의 기업환경 제공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 지원 - 지역 농수산물의 가공 확대
	외식산업	외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외식업소 경영시스템의 선진화 지원 - 식재료 유통 고속도로 달성 - 관광·문화·식재료 산업 등 동반 성장
	전문인력양성	인력 양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 식품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교육비용 등 지원 - 교육 프로그램을 수요 맞춤형으로 세분화 - 온라인을 통한 상시학습 제공 - 식품관련 직업인식의 제고로 우수인력 유치
	컨설팅	식품업체의 경영개선	- 식품제조·외식업체 대상 컨설팅 지원 - 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컨설팅 체계 구축

주: 농림수산물식품부, “식품산업 발전방안 공청회 자료”(2008. 6. 5)를 참고하여 작성.
농식품부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 한식세계화와 식품클러스터사업

- 한식세계화는 수출촉진 사업과는 별도로 한국 식문화의 교류와 전파를 통한 국가 이미지 홍보와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클러스터사업은 민간기업유치가 관건이므로 유치 인센티브 부여가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특산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지역특산식품의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함.

□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

- 식품제조업과 외식분야 투자는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임을 감안하여 인프라위주로 지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표 5〉 식품산업정책 유형별 쟁점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구분	쟁점사항	바람직한 추진방향
식품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R&D 와 국가 R&D • 식품 R&D 관리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신성장 R&D 집중 • 농업 R&D 관리 일원화 및 독립기관 설치
한식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마케팅 • 농업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문화 전파 및 교류를 통한 국가 이미지 홍보와 위상제고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과 기업유치 가능성 • 농업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지원 지양 • 민간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 지역특산식품클러스터와 연계
제조업/외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영역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위주 지원으로 최소화

□ 부처 간 정책 조정체계 구축

- 식품산업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 보건복지부(식품안전 및 위생),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지식경제부(산업표준 설정, 수출 및 일반적인 산업진흥), 중소기업청(중소기업육성) 등으로 분산·추진되고 있음
- 식품 R&D 사업 사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식약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분산 수행

〈표 6〉 부처별 주요 식품산업 정책 관련사업 2007

부 처 명	주 요 사 항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소비촉진 홍보 사업 • 한식 세계화사업 • 식품업체 경영활성화 자금지원 • 전통식품 CODEX 규격화 사업 • 식품표준화 촉진사업 • 우수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 • 우수향토음식발굴지원 사업 • 전통식품 명인제도 • 지리적 표시제도 • 전통주사업 활성화 대책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지원 • HACCP 지원 • 국민영양조사 • 해외박람회 • 건강기능식품육성·지원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시행 • 프랜차이즈산업 B2B구축 • 염산업경쟁력 강화

- 식품관련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다 보니 업무를 통괄 조정하는 기능이 없어 사안에 따라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음.
- 현재 부처별로 분산·수행하고 있는 식품산업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일본의 식품산업정책

1) 추진배경

- 일본은 1980년대부터 농정의 중심을 농업생산에서 점차 식품산업과 소비자의 안전, 건전한 식생활 위주로 전환하는 농정변환을 추구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기반의 강화가 농정의 중요한 정책영역이 되고 있음.
- 일본이 2005년 새로 수립한 '농정개혁5개년계획'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식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임.
 - 식품산업과 관련한 정책개혁의 방향으로 '식품산업과 생산자와의 연계 강화 및 식품 유통의 효율화·합리화 도모', '식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 재산권 등의 활용',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과 성과 보급' 등이 있음.

2) 주요사업 내용

- 식품산업과 생산자와의 연계 강화 및 식품 유통의 효율화·합리화 도모
 - 식품산업 담당자 등과 농업생산자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 계약거래의 추진 등 식품 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강화
 - 산지개발 등을 통한 산지 브랜드의 육성
 - 고부가가치 상품의 제품화 등을 추진
 - 도매시장의 재편·효율화
 - 직거래의 추진

- 무선 IC태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물류 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 등 식품 유통의 구조 개혁을 추진
- 식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 재산권 등의 활용
 -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는 주로 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므로 식품 등 지역브랜드 보호제도를 검토
 - 지역브랜드를 확립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위한 조사·검토의 실시
-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과 성과 보급
 - 폴리페놀, 카테킨 등 식품의 다양한 건강 기능성 성분을 밝히고 제품화하여, 식품 표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일 등의 DNA 품종·산지 판별 기술의 개발 등 국민·소비자의 관심에 상응하는 신기술 개발의 촉진

3.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강화 방안

가. 연계의 필요성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푸드시스템 구축

-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에 부응한 안전하고 고품질의 국내 농식품 공급이 주요 과제임. 농산물은 산지에서 포장, 가공 등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음.
- 이를 위해 국내 농수산업은 산지에서부터 농수산물의 포장, 가공, 유통,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식품산업과 같은 후방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임.

□ 국산 농수산물의 식품제조(가공) 및 외식분야 공급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산지에서의 농산물 전처리나 2차 가공 등을 활성화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킴.
 - 중소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지역농어업 생산자와 연계한 지역농식품 가공의 활성화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판로가 보장되고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함.
 - 외식체인점과 학교급식 등 대형급식업체와 직거래 체계 구축

□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기여

- 식량자급률은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산 농식품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제고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곡물자급률 27%, 열량자급률 46% 등 OECD 30개국 중 28위로 낮은 수준임.
- 적정수준의 식량자급률 유지는 국제곡물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에 기여할 것임.

〈표 7〉 자급률 유형별 수준 비교

단위: %

구 분	1995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곡물자급률 ¹⁾	29.1	31.4	29.7	27.8	26.6
식용곡물자급률 ²⁾	55.7	57.6	55.6	53.3	51.3
열량자급률	50.6	54.2	50.6	45.6	45.6
금액기준자급률 ³⁾	81.1	88.9	na.	na.	na

주: 1), 2) 농림부 발표수치임. 3) 1998년 불변가격기준.

자료: 농림부. 2007, 「농림업주요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2006식품수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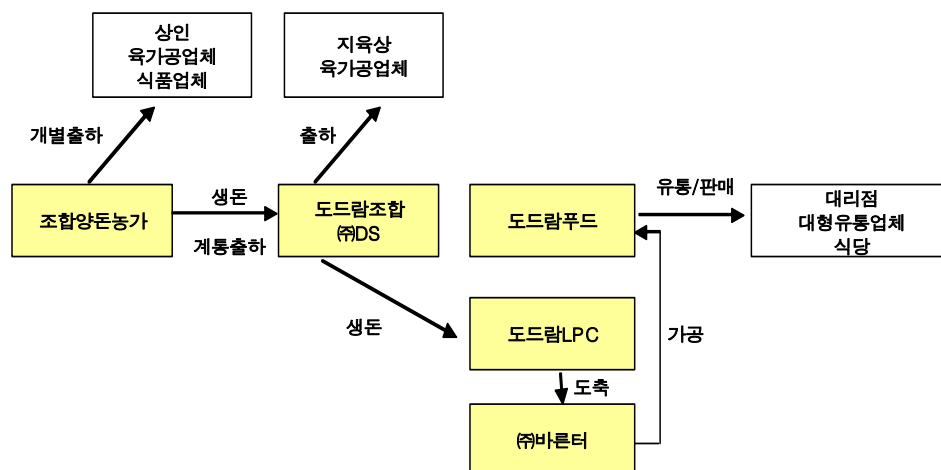
나. 연계가능성 검토

□ 계열화를 통한 연계성 제고

- 농업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푸드체인을 수직 결합(vertical integration)을 통해 계열화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 해외사례: 미국의 sunkist 등

- 수직결합은 축산분야의 계열화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며, 산지 농가와 계약 등 품목과 연계주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양돈 및 육계 계열화 사례: 도드람, 선진, 하림 등

[그림 3] 도드람농협의 계열화 사업구조



□ 수요측면에서의 유인 제공을 통한 연계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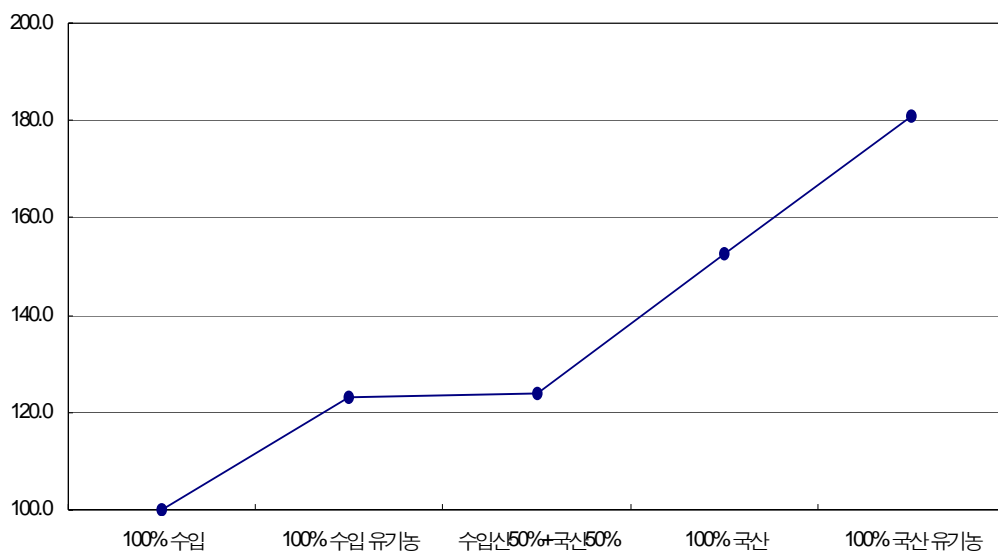
- 국산농식품의 수출 확대, 세계화, 한국형 식생활 개발 및 보급, 학교급식 등 수요측면에서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높일 수 있음.
- 유인 제공을 통한 국산 농식품의 소비확대는 원료농산물의 수요창출로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임. 소비확대는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국내산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신뢰가 구축될 때 가능함.

〈표 8〉 수요측면에서의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사례

구분	연계사례
한식세계화	• 비빔밥 및 고추장 수요 확대와 원료사용 증대
수출촉진	• 김치 수출 증대와 배추 및 고춧가루 가공 수요 증대
식생활 개선	• 한식단 개발·보급과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
학교급식	•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나 안전농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등 표시·인증제도의 정착이 중요한 소비확대수단이 될 수 있음.
- 두부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 조사결과 국내산 원료 사용 프리미엄이 수입산에 비해 50% 이상 높게 나타나 품목에 따라 국산 원료의 가공연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국내산 및 수입산 콩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두부 가격 지불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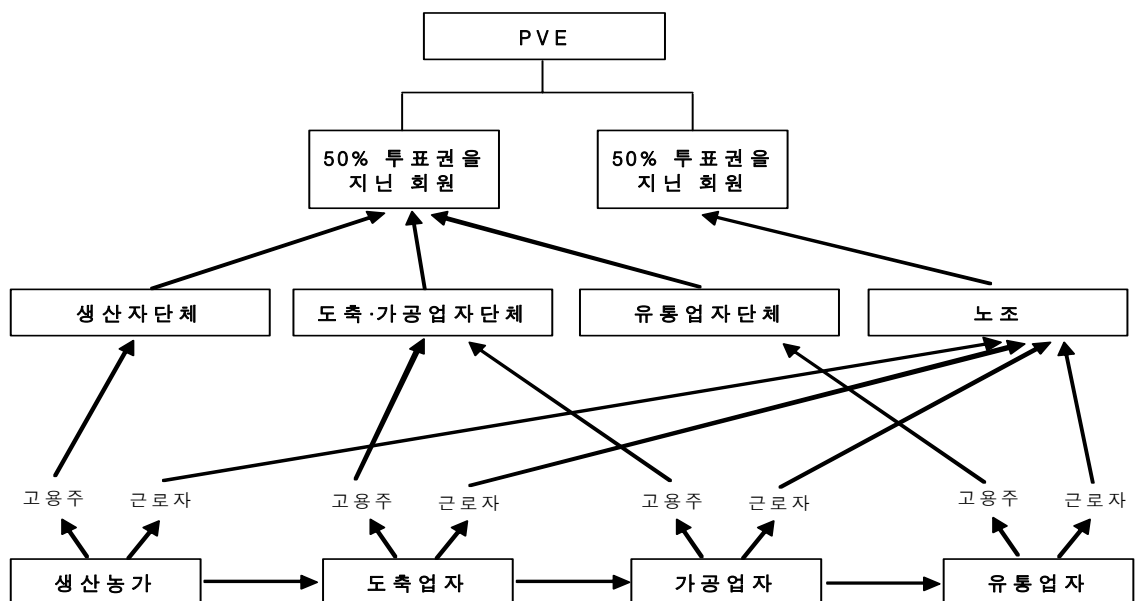
자료: 최지현 외. 2007.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 연계 지원방안

□ 품목별 푸드체인(생산-유통-가공-소비)의 수직통합 체계 구축

- 푸드체인 수직 통합은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필연적으로 강화시킬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직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
- 네덜란드는 1954년 제정된 무역조직법(Statutory Trade Organisation Law)에 의거 해당 품목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행위 주체들을 아우르는 수직적 결합 형태의 품목대표조직을 육성함. 즉 생산농가, 가공(도축)업자, 유통업자들의 조직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상위 조직임.

[그림 5] 네덜란드 축산물 위원회(PVE)를 통한 수직적 통합 사례



- 수직통합의 전제조건은 산지의 조직화이며, 공동계산제의 정착, 산지전처리 및 유통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실현하여 농식품의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이 선행되고, 생산자조직이 가공, 유통 및 소비단체와 연계하여 통합된 조직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표 9〉 푸드시스템 연계 지원 분야별 주요내용

푸드시스템 연계분야	주요내용
산지조직화 및 계열화	•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공동계산제 전면 도입
네트워킹	• 산지와 업체 정보교류체계 조직
산지시설지원	• APC, 전처리시설, 위생시설 지원
식품클러스터지원	• 지역 특산식품클러스터와 연계 지원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한 인프라 지원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는 정보 및 통계 구축, 인증 및 표시제도, R&D 등으로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인프라 조성을 통해 민간위주의 식품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산, 가공·유통·소비 등 푸드시스템 통계정보의 DB화
- 농수산물과 식품의 표준규격을 통합하는 농수산식품통합규격제도(KAS) 도입
- 지리적표시제의 정착과 식품·음식으로의 확대 시행
- 신성장 수요분야 R&D 지원

〈표 10〉 식품산업관련 주요 인프라 내용

주요분야	주요내용
통계정보 DB 구축	• 식품제조업, 외식업, 소비통계 등
규격 제정	• 농산물과 식품의 규격 통일
표시인증제도 정비	• 지리적 표시제 확대, 유기식품인증제 도입
R&D 지원	• 신성장 수요분야 지원 확대

□ 전통식품의 산업화 및 글로벌화 추구

-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과학화·현대화하여 세계 명품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맛의 표준화, 전통식품의 CODEX 규격 확대
 - 전통식품인증제도 개선
 - 전통식품 생산업체 산업화 지원(위생시설 등)
- 한식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내외국인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음식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을 추진함.
 - 식단 및 음식 레시피의 표준화
 - 한식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현지화 및 고급화가 가미된 다양한 식문화상품 개발
-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해외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한식 및 한식당 소개 책자 제작 및 보급

□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확산

- 전통적인 우리 식생활에 대한 지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식품소비 생활을 유도함.
- 한국형 식생활로 식습관 개선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 한식 소비 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

- ◆ 선진국들은 식생활 교육 등의 영양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
 - ▶ 일본 ‘건강일본 21’, ‘식육기본법’, 호주 ‘EWA(Eat Well Australia)’ 등
- ◆ 복지부 ‘Health Plan 2010’,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 작성·보급, 교육부의 학교 식생활 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종합·체계적인 추진 미흡

4. 요약 및 결론

- ☐ 소비패턴의 변화로 식품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식품산업은 개방화시대에 고품질 안전 농식품의 공급을 통해 소비자 기호 충족과 농업·농촌 활로 개척의 통로가 되어야 함.
- ☐ 식품산업은 소비자 지향적인 사업, 식문화 유지 발전과 공세적인 해외진출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필요
 - 푸드체인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식생활 교육 등
 - 전통식품의 계승 및 발굴, 식문화의 교류 및 전파 등
- ☐ 정부는 일정한 원칙하에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
 - 공공성이 높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 우선 지원
 -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시장 왜곡과 모럴헤저드 초래
 - 농업과 연계효과가 큰 사업 우선 지원
 - 푸드체인 전체를 고려한 산업정책 시각에서 지원
 - 농수산물 가격과 품질을 업그레이드시킬 가능성이 큰 분야 지원
- ☐ 식품산업정책의 우선순위 부여
 - 식품산업정책을 “공공성 유지분야”, “전략적 육성분야”, “선택적 조성분야”로 구분하고, 공공성과 전략적 육성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성유지분야: 인프라성격의 사업
- 전략적 육성분야: 전통식품 발전과 계승, 식문화교류 및 전파 등

□ 식품산업정책의 선택과 집중

- 식품 R&D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신성장 R&D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 투자함.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에서 분산수행하는 식품 R&D는 일원화해야 함.
- 한식세계화는 한국 식문화의 교류와 전파를 통한 국가 이미지 홍보와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함.
- 클러스터사업은 민간기업에 대한 유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 특산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추진함.
- 식품제조업과 외식분야 투자는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임을 감안하여 인프라위주로 지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정책 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

- 현재 부처별로 분산·수행하고 있는 식품산업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정책은 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푸드체인에서 농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추진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필요성
 - 시장개방하 경쟁력 있는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 국산 농산물의 식품가공 및 외식분야 공급을 통해 부가가치 제고
-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기여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방향은 푸드시스템의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과 수요 확대에서 찾아야

- 품목별 계열화사업 확대, 한식세계화, 식생활 개선 및 한국형 식생활 보급 등 소비측면에서의 유인 제공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기본전략이 요구됨. 인프라 지원, 전통식품의 산업화 및 글로벌화,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확산 등이 중점 과제임.

<참고자료> 일본의 식품산업진흥과 농업과의 연계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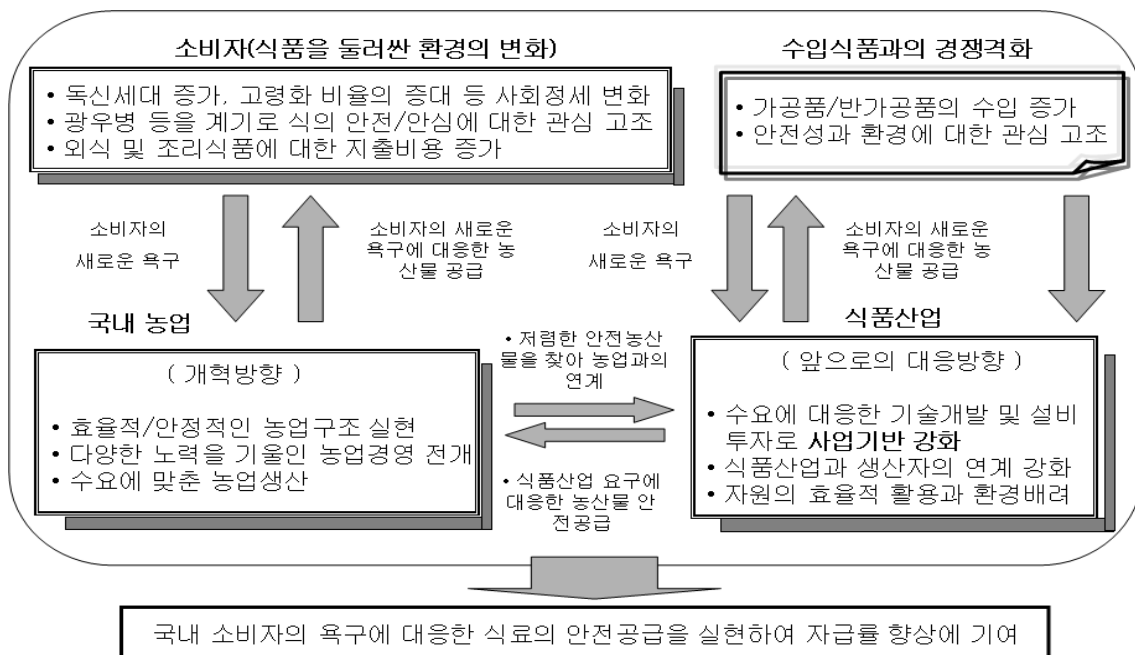
1.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 일본은 1980년대부터 농정개혁을 실현하면서 농정의 중심을 농업생산에서 점차 식품산업과 소비자의 안전, 건전한 식생활 위주로 옮겨가고 있음.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기반의 강화가 농정의 중요한 정책영역이 되고 있음.
- 일본이 2005년 새로 수립한 농정개혁5개년계획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식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임.
 - 식품산업과 관련한 정책개혁의 방향으로 ‘식품산업과 생산자와의 연계 강화 및 식품 유통의 효율화·합리화 도모’, ‘식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 재산권 등의 활용’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신기술의 개발과 성과 보급’ 등이 있음.
- 식품산업과 생산자와의 연계 강화 및 식품 유통의 효율화·합리화 도모
 - 식품산업 담당자 등과 농업생산자 사이의 네트워크의 구축
 - 계약거래의 추진 등 식품 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강화
 - 산지개발 등을 통한 산지 브랜드의 육성
 - 고부가가치화 상품의 제품화 등을 추진
 - 도매시장의 재편·효율화
 - 직거래의 추진
 - 무선 IC태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효율적 물류 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 등 식품 유통의 구조 개혁을 추진

- 식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 재산권 등의 활용
 -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는 주로 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므로 식품 등의 지역브랜드 보호제도를 검토
 - 지역브랜드의 확립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위한 조사·검토의 실시
-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과 성과 보급
 - 폴리페놀, 카테킨 등 식품의 다양한 건강 기능성 성분 등을 밝히고 제품화하여, 식품 표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일 등의 DNA 품종·산지 판별 기술의 개발 등 국민·소비자의 관심에 상응하는 신기술 개발의 촉진
- 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과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음.
 - 식품 산업의 사업 기반 강화
 - 저비용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 특정 농산 가공업의 경영 개선
 - 중소기업 지원 등 업종 횡단적인 시책의 활용
 - 식품 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제휴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에 근거한 식품생산 제조 등 제휴 강화
 - 지역 브랜드 육성·상품화
 - 식품 유통의 합리화
 - 도매시장의 기능·제휴 강화
 - 식품 소매업의 활성화
 - 식품 유통의 효율화

- 식품 산업의 환경영향 감소 및 자원의 유효 이용의 확보
 - 식품 산업의 순환형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축(식품 리사이클 · 용기 포장 리사이클의 촉진)

[참고그림 1] 일본 식품산업의 과제와 향후 대응 방안



2. 식품산업 정책 관련 조직과 제도

- 일본의 식품산업 관련조직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조직과 정부의 예산과 지원을 받는 여러 법인과 협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 농림수산성의 업무 분장

-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품산업기획과는 식품산업 등의 금융 · 세제, 농림수산 관련 기업설비 투자동향 조사, 대내 · 대외 직접 투자, 식품기업 경영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식품산업진흥과는 각 품목별 생산·유통의 합리화,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특히 외식산업실은 외식산업·반찬사업·냉동식품 산업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음.

〈참고표 1〉 일본 농림수산업 종합식료국 식품산업 관련 업무 분장

식품산업 담당 과	세부 담당	담당업무
식품산업기획과	총무반	식품산업기획과의 창구
	금융세제반	식품산업 등의 금융·세제
	산업구조반	농림수산 관련 기업조사 분석, 대내 직접투자
	진흥조정반	중소식품 기업 등의 진흥, 특정 농산가공업 대책, 중소기업 등의 단체 관계 관리 등
	식품기업반	농림수산 관련업종의 산업재생, 신규사업 육성 등
	지역식품반	지역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제휴 추진 등
식품산업기획과 (기술실)	기술기획반	식품산업의 기술개발·보급의 기획
	기술관리반	식품제조 단계의 HACCP 도입 지원 대책
	기술진흥반	식품산업의 첨단기술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기술개발 사업성과의 평가
식품산업기획과 (식품환경대책실)	환경기획반	식품산업과 관련되는 환경대책의 기획, 식품산업의 국제적인 환경문제 기획
	식품리사이클반	식품순환 자원의 재생 이용 기획·지도
	용기포장리사이클반	용기포장 폐기물의 재생품화 기획·조사·지도
식품산업진흥과	총무반	식품산업진흥과의 창구
	무역반	국제협정(커피), 대두의 비축, 유지의 수급, 관세 할당(조제식용유, 무당 코코아 조제품, 옥수수(콘 오트밀 용 등))
	식품제1반	유지·유지 가공품·두류 가공품·채소 절임 등의 생산·유통의 합리화, 소비의 증진·개선
	식품제2반	과자·청량음료·조미식품·통조림·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등의 생산·유통의 합리화, 소비의 증진·개선
	신식품반	신식품의 생산·유통의 합리화, 소비의 증진·개선, 신식품의 조사·분석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실)	기획조사반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획·조사
	업무진흥반	반찬·냉동식품의 생산·유통 합리화, 소비의 증진·개선, 외식산업 식재의 유통 개선·조달

- 정부의 예산 지원 단체로는 독립행정법인인 식품종합연구소,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 재단법인인 식품산업센터, 일본식품분석센터 등이 있음.

나. 제도

- 일본에서 식품산업과 관련한 법은 다음과 같음.
 - 식료·농업·농촌기본법(99년)에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제17조)’을 규정하여 사업기반의 강화, 농업과의 연계추진, 유통 합리화 등의 시책을 강구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기타 관련 법률로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식품리사이클법(퇴비 등 재활용), 특정농산가공업경영개선임시조치법, 농림물자규격화및품질표시적정화법(JAS법), 식품제조과정의관리의고도화에관한임시조치법,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등의촉진에관한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이 있음.
- 이 밖에 식품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은 다음과 같음.
 -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 신사업창출촉진법
 - 중소기업조합법
 - 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법

3.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가. 식품산업의 사업기반 강화

1) 기술개발의 촉진

- 공공 기관과의 역할 분담 하에, 안전식품의 제조 기술, 국산 농산물의 가공 적성의 향상 등 기술개발을 추진
 - 기초 연구의 성과 이전이나 실용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환경 문제에 대응 등 수익과 직접 결합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등 새로운 과제가 대두
- 일본의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경쟁적인 환경 하에서의 효율적인 기술개발
 - 연구 성과의 실용화 촉진
 - 지적 재산의 이익 활용 추진에 의한 국산 브랜드 확립
- 과제에 대한 대응 방향
 - 경쟁적 자금 활용에 의한 정책과제에 대응한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추진
 - 산학관 제휴를 위한 코디네이터나 지적 재산의 전략적인 활용을 위한 인재육성의 추진

2) 중소기업지원 등 업종 횡단 대책의 활용

-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민간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을 지원
 - 국제화의 진전에 수반하는 농산가공업 경영의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농산가공업 경영개선임시조치법에 근거해서 신기술 개발,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정책금융 가운데 식품산업을 위한 융자에 대해서 정책금융 개혁의 방향에 따라 공익성, 리스크 평가 곤란성 2개의 기준에 준거하여 검토

나. 식품유통 개혁의 추진

1)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의 추진

- 도매시장이 21세기에 신선 농산품의 기간적 유통기구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04년 6월에 도매시장법을 개정

2) 농업과의 제휴에 의한 다양한 유통 루트 육성

- 다양한 유통 루트를 통한 선호도 높은 국산 농산품의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자나 그 조직·단체가 직접 판매 등을 추진
- 가공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원산지 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

다. 식품산업의 환경부하 저감과 자원의 활용

- 최근 지구 온난화나 폐기물 문제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한 폐기물의 감량 및 리사이클의 추진
- 식품산업의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식품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 감량화나 재생 이용 등 대처 필요
- 식품폐기물과 관련한 대책은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등의촉진에관한법률(식품 리사이클법)」(2001년 5월 시행)에 근거한 식품폐기물의 재생 이용 등을 추진
- 지역단위에 의한 집합 처리의 촉진, 재생이용 수법의 확대 등 재생이용의 촉진을 도모

라. 식품산업과 국내농업과의 연계강화

1) 식품산업과 농업의 다양한 연계형태

☐ 식품제조업자와의 연계

- 식품제조업자가 가공원재료로 수입농산물보다 고가의 국산농산물을 사용하게 하려면, 수입농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 됨.
- 식품제조업자와 농업자 등이 연계하여 식품 제조업자의 기술적, 경영적 노하우를 살리면서, 원재료 농산물의 생산 고도화나 가공시설의 정비, 운영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역 농산물의 수요확대와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식품유통업자와의 연계

- 식품유통업자는 연계에 의한 상품의 차별화, 다양한 상품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고, 복수의 농업자와 연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외식산업 사업자와의 연계

- 외식산업 사업자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개개의 외식산업 사업자의 요구에 일치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함.

2) 연계의 추진 강화 방안

☐ 연계의 추진방향

- ① 식품산업사업자와 농업자 등 다양한 연계의 추진
- ② 식품산업의 요구와 농업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바람직한 연계의 지원
- ③ 거래관계의 안정성·계속성의 확보
- ④ 신기술, 적성 품종 등의 개발·보급
- ⑤ 신상품의 개발·판매의 촉진, 시설의 정비

☐ 식품산업과 국내농업과의 연계강화 방안

- ① 식품산업과 국내농업과의 연계
 - 농업에서는 생산 코스트의 인하 등을 통해서 식품산업 측의 요구에 대응한 저렴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식품산업 측에서도 선도 지향, 건강 안전 지향 등의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식품산업의 마케팅 능력, 경영 노하우 등을 활용한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
 - 식품사업자가 농업에 직접 참여하여 농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례뿐 아니라, 산지와의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중 조달 등을 행하는 사례, 농업생산법인 등과 연계하여 프랜차이즈화 한 농업 사례도 있음.

②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에 의한 지역브랜드의 확립

-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면 생산·유통 비용의 절감과 함께 지역의 특색 있는 농산물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역식품의 고품질화·차별화를 통해 지역브랜드로 확립
-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만으로 이를 추진하기에는 자본, 인재 등의 제약으로 리스크나 곤란이 따르기 때문에 생산자나 공공 연구기관 등과도 연계하여 브랜드화를 촉진
- 아울러 확립한 지역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사회적 평가를 얻고 있는 지역식품의 통일적인 제법 기준 확립 등에 의한 생산지 유지를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브랜드의 표시 등 보호의 충실·강화도 도모

③ 식료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의한 연계 추진

- 지역에 따라서 새로운 연계의 모습으로 지방특색산업의 부산물 이용이나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업종 연계의 클러스터에 의한 기술개발, 신기술의 기업화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지역 자원이나 인적자원의 발굴, 지역 코디네이터의 육성에 의해 이러한 타업종 연계의 식료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추진
- 농림수산성에서는 이업종 간의 연계를 지원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이 진행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식료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음.
- 이업종 간의 연계사례를 발굴, 추진사례로 전파하여 효율적인 연계추진을 지원하고 있음.